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출범배경과 활동방향, 해결해야 할 문제점

시민위원회?

박영숙(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민선지방자치제와 녹색위

1995년 6. 27 4대 동시지방선거에 의해 30여년만에 부활한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제의 1년 평가는 일부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빨리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의 지방자치제가 기존의 중앙집권적 행정의 틀과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채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것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에 필수적인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서 생긴 문제이다. 자율권확대를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을 비롯해서 조직권, 행정권, 인사권, 재정여건개선권 그리고 자치사무확대권 등에 대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자치제로서의 민선지방자치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정에의 시민의 참여이다. 시민자치란 사회구성원 스스로가 지역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 해결하고 책임지는 더불어 사는 사회 「자치적 공동체」를 함께 건설하는 것이다. 공동체사회를 지향하는 과제에 정부는 시민이 어떻게 참여하게 하고 시민은 어떻게 얼마나 참여하는가 하는 것이 민선지방자치제의 성공의 관건이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지도력과 비전 그리고 주민설득력에 달려 있다.

민선지방자치 1년 평가에서 보면 광역자치제는 중앙정부에게 기초자치제는 광역자치제에게, 주민은 정부에게 자율권 행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현실은 민선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간 관계의 재조정과 자치체들의 자기혁신 노력 그리고 주민과 함께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민선시장 ^{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서울시는 환경행정을 시민과 함께 펴는 기구로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녹색위)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시장을 시민과 함께 하려는 많은 지자체들과 민주시민들이 녹색위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시민의 시장참여의 내실을 기해야하는 민선지방자치2차년도 문턱에서 녹색위의 출범배경과 활동방향 그리고 당면문제를 점검해 보는것은 시민참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길잡이가 될것으로 여겨 의미있게 생각한다.

녹색위의 출범 배경

서울시의 급성장기가 남긴 후유증을 극명하게 드러낸 삼풍백화점붕괴 참사 현장에서 출범한 서울민선자치정부의 우선 책무는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었다. 조순 민선서울시장은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과거의 물질위주의 도시관에서 인간중심의 도시관으로 변혁해야 한다.('95. 10. 바른시장기획을 위한 국제세미나)는 전제에서 인간적인 가치가 서울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서울을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시 행정을 시민과 함께 펴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지금까지의 관료주의 행정과 밀폐 행정에 위축돼 있던 시민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시민들은 이제야 민주시민으로서의 주권행사를 제대로 하게 되었다는 기대에 부풀게 하기에 족했다.

서울시가 인간중심의 시장을 펴는 주요정책으로 채택한 것은 안전, 교통, 환경, 복지, 주택 및

서울시가 인간중심의 시정을 펴는 주요 원제로서 채택한 것은 안전, 교통, 환경, 복지, 주택 및 도시관리, 문화와 세계화이다. 그 중에서도 우선과제로서 안전, 교통, 환경, 복지문제에 주력하기로 한것은 이 문제들이 시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문별 투자비용의 '95년과 '96년의 비교에서 보듯이 도시방재 예산을 4.8%→8.0%로 환경분야 15.2%→21.2%로, 복지의료분야 4.2%→6.0%로 증액한 사실에서 그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서울시는 민선지방자치제에서만 가능한 시정의 장기계획인 3개년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초안마련 단계에서는 계획수립을 위해 구성된 바른시정기획단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들을 통해서 완성단계에서는 폭넓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으로 민간의견을 대폭수용한것은 정책수립과정에서 볼수있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하나의 변화는 시행정의 효율을 높이기위해 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부서에 따라 시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서울의 환경문제 개선과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환경행정을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 녹색위이다.

이 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는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 조항에 따라 제정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96. 4. 29의회통과, 이하 운영조례)」에 두고 있다. 1995년 11월 22일에 시장이 임명한 100명의 서울시의 각계 각층의 대표(각자치구 25명, 시민, 환경단체 25명, 언론계 14명, 학계 9명, 시의회 7명, 교육계 5명, 연구소 5명, 종교계 4명, 기술계 4명, 법조계 2명)로 구성된 녹색위가 자치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월 14일 임원진(자치기구)을 구성한 제1차 전체회의 이후부터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활동의 가동은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원회가 마련한 '9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시장의 인준을 거친 5월초에야 이루어 졌다. 녹색위원 서울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여타 자문위원회와 예전의 예산지원단체(소위 지칭되는 관별단체)의 성격과 다른 것은 녹색위는 서울시의 운영조례에 의거 서울시의 소속기구이나 자치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에는 녹색위가 전개하는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위원간의 협력, 사업조정, 그리고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고(운영조례 제7조) 사무실을 서울시청내에 두도록(운영조례 제7조④)되어 있어 현재 서울시 환경관리실 내에 자리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화 778-0311, 팩스 778-0312)

녹색위의 활동방향

운영조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은 ①주요환경정책심의 및 정책대안 건의 ②환경교육 및 홍보, 환경보전실천운동전개 ③대기, 수질, 폐기물등 각종환경오염감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소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산하에 환경정책, 시민실천 그리고 환경오염 감시등의 3개분과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은 시장이 부의 하는 의제에 대해 심의하기도 하지만(운영조례 제16조①) 위원회 스스로가 환경해정에 대한 대안제시를 시장에게 할 수 있다(운영조례 제16조 ②). 녹색위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운영조례 제21조).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운영조례 제22조). 녹색위가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운영조례 제23조 ①②항과 제24조에 의거 시장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녹색위는 서울시의 환경행정의 시민참여의 창구이다. 그리고 서울시정부와 시민간의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녹색위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서울시의 환경행정이 범시민운동으로 확대되어 서울시의 환경문제는 서울시민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행정에서 특별히 시민참여가 중요한 것은 물문제, 공기문제, 쓰레기문제등의 환경문제해결

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개개의 시민들(기업, 정부포함)이 자기의 선 자리에서 작은일 부터(물아끼기, 전기아끼기, 종이야끼기, 대중교통수단이용하기, 쓰레기감량 등)환경친화적으로 실천하는데서 비롯된다는데 있다. 이들의 환경의식 과 실천의지 없이 정부의 환경행정의 성공은 어렵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지구환경보전의 표어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환경행정은 정부독주(특히 중앙정부)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1992년 브라질에서의 지구정상회의에서 각국가 정상(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들이 합의한바 있는 21세기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인 「의제 21(Agenda 21)」에서는 지방정부와 시민 그리고 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정부가 사회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환경보전은 생산과 소비양식의 개혁없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계의 지방정부들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도시화현상으로 훼손된 지역 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데에도 시민의 시정 참여가 주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정의 주요부서에 시민위원회를 두고 시민의 의견을 대단히 시정에 반영하고 도달하고 있는 추세에서 보면 서울시가 민선지방자치시대이후 시정 각 부문에 시민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바른정책 결정이라고 본다.

녹색위의 모든 활동과 사업추진에 지역사회 모든 집단과 기구에게 공개모집하여 실시한다. 그것은 보다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녹색위의 7월현재까지의 활동은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서울환경헌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서 시민의 의견 수렴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지구의날 행사와 (4. 22), 세계환경의 날(6. 2~8) 주간행사에서 자전거 타기 캠페인과 1,500여명으로 조직된 서울시민환경감시단 발단식개회 그리고 도봉산생태계 보전운동 등을 전개하였고 지금 3개분과위원회의 '96년도의 사업공모를 공고해 놓고 있다. 녹색위의 '96년도의 활동은 시작단계로서 시민참여제도화의 초석을 마련하고 이제도의 실효가능성 모색과 실현모델개발에 주력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97년도의 본격적인 참여를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할수 있다.

녹색위는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펼치는 환경행정에서 서울시와의 민간파트너로서 환경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제도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환경단체, 대학과 연구기관, 특수활동단체(산악회 스킨바다이버, 무선통신회, 낚시회등)들과 자치구의 시민등이 참여하는 환경오염시민감시망을 운영하여 지역내 환경오염행위의 자율감시 능력을 높이며 서울시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홍보와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환경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노력한다. 동시에 서울시가 시민참여로 만들어 '97년 6월에 유엔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서울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인 「서울의제 21」 작성을 시민실천지표개발을 비롯해 완성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녹색위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

민선자치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하는 참신한 시정 3개년계획의 청사진에 기대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출범한 녹색위의 진로가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이 지난 5개월간의 경험이다. 언론에서는 「활동중단」 심지어 어떤 환경관련 주간신문에서는 「말뿐인 시민참여, 관변단체 전락우려」 또는 「녹색위의 진로 불투명」 등의 혹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불협화음이 불거져 나온 일차적인 원인은 지방자치 1년 평가에서 지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직 중앙 또는 광역정부로부터 자치체의 기본조건인 자율권을 얻어내지 못한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구조정과 인사문제및 재정집행상의 자율권을 이양받지 못한 자치체가 시정에의

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많고, 더구나

시민참여라는 새로운 정책집행을 위한 여건마련이 용이하지 않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안타까운 것은 행정요원들의 행정우위의 고정관념과 기존행정 틀에서의 보신주의 적인 자세가 민선자치단체장의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의지를 담아 내^① 녹색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탄력성있는 운영의 묘와 결단성을 전혀 보여 주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녹색이 실용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녹색위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들은 대부분이 민주주의식이 강한 자주적이며 자율적이며 자발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시민참여의 실효성제고에 필수적인 이들의 창의성과 열의를 유도해 내^② 위해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양식이 ①일시적인 참여가 아닌 상시적 참여 ②강제(수동)적인 참여가 아닌 자율(능동)적인 참여 ③형식 또는 요식이 아닌 실질적 참여 ④행정대상으로서가 아닌 행정주체로서의 참여(동반자적 참여) ⑤기존 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창의성발휘가 가능한 참여 ⑥불신이 아닌 상호신뢰하는 관계의 참여 ⑦상호간의 역할의 존중과 보완적인 참여 ⑧공동목표달성을 위한 협동관계의 참여가 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민선지방자치=시민자치제하에서의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환경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은 처음 시도되는 새로운 행정구도이다. 지금까지의 관주도의 밑거름이었던 행정관행이 체질화되어 있는 행정요원에게 있어서나 행정에 관한한 관망자의 위치에 머물며 정부가 해주기만을 기대하는 시민에게 있어서나 정부방침에 따른 활동에 무비관적이었거나 자칫 시정의 제도적인 시민참여를 백안시 할수도 있는 시민단체에 있어서 익숙치 않은 일이다. 그만큼 시정의 제도적 시민참여의 올바른 인식의 정립은 쉽지 않다. 반면 새로운 시도이기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여 기대를 가지게 한다. 이 말은 이들 모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뜻밖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민선지방자치에 있어서 이루어 내야만 하는 책무이므로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서도 안되는 과제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녹색위에 대한 기대

녹색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녹색위의 환경행정에의 참여가 앞으로 범시민운동으로 발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참여의 기회는 관념적인 서울시민이 아닌 골목골목마다에서 만나는 모든 남녀노소에게 주어져야 하고 녹색위의 활동단위는 자치구, 동, 통, 반단위의 현장중심이 되며 그리고 사업내용은 생활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운동으로 누구 나가 참여할수 있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용적 본능으로 더한다

서울시가 민선지방자치시대를 열면서 민선시장의 시정방향제시에서 가장 잘 한일이 바로 서울시정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문호개방과 실질적인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시민 개개인의 참여 없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행정을 위해 각계 각층을 막나 하고 있는 녹색위의 설치 및 운영은 서울시의 환경행정을 밝게 전망하게 하여 주고 있다. 녹색위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발휘가능한 「환경자치」의 틀이 제대로 마련될 때 서울시의 환경행정에 큰 전환을 갖어 오며 지속가능한 서울 건설에 기여할것 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서울시의 환경행정의 핵심과제인 시민참여성과의 성취여부는 전국의 자치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주시한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출범배경과 활동방향, 해결해야 할 문제점

시민참여의 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

2000. 10. 10.

박영숙(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민선지방자치제와 녹색위

1995년 6. 27 4대 동시지방선거에 의해 30여년만에 부활한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제의 1년 평가는 일부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빨리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의 지방자치제가 기존의 중앙집권적 행정의 틀과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채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것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에 필수적인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서 생긴 문제이다. 자율권확대를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을 비롯해서 조직권, 행정권, 인사권, 재정여건개선권 그리고 자치사무확대권 등에 대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자치체로서의 민선지방자치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정에의 시민의 참여이다. 시민자치란 사회구성원 스스로가 지역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 해결하고 책임지는 더불어 사는 사회 「자치적 공동체」를 함께 건설하는 것이다. 공동체사회를 지향하는 과제에 정부는 시민이 어떻게 참여하게 하고 시민은 어떻게 얼마나 참여하는가 하는 것이 민선지방자치제의 성공의 관건이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지도력과 비전 그리고 주민선풍력에 달려 있다.

민선지방자치 1년 평가에서 보면 광역자치체는 중앙정부에게 기초자치체는 광역자치체에게, 주민은 정부에게 자율권 행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현실은 민선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간 관계의 재조정과 자치체들의 자기혁신 노력 그리고 주민과 함께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민선시장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서울시는 환경행정을 시민과 함께 펴는 기구로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녹색위)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시정을 시민과 함께 하려는 많은 지자체들과 민주시민들이 녹색위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시민의 시정참여의 내실을 기해야하는 민선지방자치2차년도 문턱에서 녹색위의 출범배경과 활동방향 그리고 당면문제를 점검해 보는것은 시민참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길잡이가 될것으로 여겨 의미있게 생각한다.

녹색위의 출범 배경

서울시의 급성장기가 남긴 후유증을 극명하게 드러낸 삼풍백화점붕괴 참사 현장에서 출범한 서울민선자치정부의 우선 책무는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었다. 조순 민선서울시장은 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과거의 물질위주의 도시관에서 인간중심의 도시관으로 변혁해야 한다.(’95. 10. 바른시장기획을 위한 국제세미나)는 전제에서 인간적인 가치가 서울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서울을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시행정을 시민과 함께 펴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지금까지의 관료주의 행정과 밀폐 행정에 위축돼 있던 시민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시민들은 이제야 민주시민으로서의 주권행사를 제대로 하게 되었다는 기대에 부풀게 하기에 족했다.

서울시가 인간중심의 시정을 펴는 주요정책으로 채택한 것은 안전, 교통, 환경, 복지, 주택 및

도시관리, 문화와 세계화이다. 그 중에서도 우선과제로서 안전, 교통, 환경, 복지문제에 주력하기로 한것은 이 문제들이 시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문별 투자비용의 '95년과 '96년의 비교에서 보듯이 도시방재예산을 4.8%→8.0%로 환경분야 15.2%→21.2%로, 복지의료분야 4.2%→6.0%로 증액한 사실에서 그 실천의지를 읽을 수 있다.

서울시는 민선지방자치제에서만 가능한 시정의 장기계획인 3개년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초안마련 단계에서는 계획수립을 위해 구성된 바른시정기획단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들을 통해서 완성단계에서는 폭넓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으로 민간의견을 대폭수용한것은 정책수립과정에서 볼수있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하나의 변화는 시행정의 효율을 높이기위해 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부서에 따라 시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서울의 환경문제 개선과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환경행정을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 녹색위이다.

이 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는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 조항에 따라 제정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96. 4. 29의회통과, 이하 운영조례)」에 두고 있다. 1995년 11월 22일에 시장이 임명한 100명의 서울시의 각계 각층의 대표(각자치구 25명, 시민, 환경단체 25명, 언론계 14명, 학계 9명, 시의회 7명, 교육계 5명, 연구소 5명, 종교계 4명, 기술계 4명, 법조계 2명)로 구성된 녹색위가 자치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월 14일 임원진(자치기구)을 구성한 제1차 전체회의 이후부터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활동의 가동은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위원회가 마련한 '9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시장의 인준을 거친 5월초에야 이루어 졌다.

녹색위는 서울시가 통상 설치운영하고 있는 여타 자문위원회와 예전의 예산지원단체(소위 지칭되는 관(관)단체)의 성격과 다르다. 녹색위는 서울시의 운영조례에 의거 서울시의 소속기구이나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녹색위가 전개하는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위원간의 협력, 사업조정, 그리고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사문국이 설치되어있고(운영조례 제7조) 사무실을 서울시청내에 두도록(운영조례 제7조④)되어 있어 현재 서울시 환경관리실 내에 자리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화 778-0311, 팩스 778-0312)

녹색위의 활동방향

운영조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은 ①주요환경정책심의 및 정책대안 건의 ②환경교육 및 홍보, 환경보전실천운동전개 ③대기, 수질, 폐기물등 각종환경오염감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소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산하에 환경정책, 시민실천 그리고 환경오염 감시등의 3개분과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은 시장이 부의 하는 의제에 대해 심의하기도 하지만(운영조례 제16조①) 위원회 스스로가 환경해정에 대한 대안제시를 시장에게 할 수 있다(운영조례 제16조 ②). 녹색위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운영조례 제21조)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운영조례 제22조).녹색위가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운영조례 제23조 ①②항과 제24조에 의거 시장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녹색위는 서울시의 환경행정의 시민참여의 창구이다. 그리고 서울시정부와 시민간의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녹색위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서울시의 환경행정이 범시민운동으로 확대되어 서울시의 환경문제는 서울시민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행정에서 특별히 시민참여가 중요한 것은 물문제, 공기문제, 쓰레기문제등의 환경문제해결

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개개의 시민들(기업, 정부포함)이 자기의 선 자리에서 작은일 부터 (물아끼기, 전기아끼기, 종리아끼기, 대중교통수단이용하기, 쓰레기감량 등)환경친화적으로 실천하 는데서 비롯된다는데 있다. 이들의 환경의식 과 실천의지 없이 정부의 환경행정의 성공은 어렵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지구환경보전의 표어가 바로 그런 것을 의미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환경행정은 정부독주(특히 중앙정부)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1992년 브라질 에서의 지구정상회의에서 각국가 정상(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들이 합의한바 있는 21세기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인 「의제 21(Agenda 21)」에서는 지방정부와 시민 그리고 기업이 삼 위일체가 되어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정부가 사회구성원에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환경보전은 생산과 소비양식의 개혁없이 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계의 지방정부들은 환경보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도시화현상으로 훼손된 지역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데에도 시민의 시정 참여가 주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정의 주요부서에 시민위원회를 두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한 추세로 보아 서울시가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이 후 시정 각부문에 시민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잇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바른정책 결정이라고 본 다.

녹색위의 모든 활동과 사업추진은 지역사회 모든 집단과 기구에게 공개모집하여 실시한다. 그 것은 보다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녹색위의 7월현재까지의 활동은 이미 공포발효중인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서울환경현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서 시민의 의견 수렴과정에 참여한 것이「지구의날 행사와 (4. 22), 세계환경의 날(6. 2~8) 주간행사도 전개한바있다. 자전거 타기 캠페인과 1,500여명으로 조직된 서울시민환경감시단 발단식개최 그리고 도봉산생태계 보전운동 등이 행사의 내용이다. 지금 3개분과위원회의 '96년도 의 사업공모를 공고해 놓고 있다. 녹색위의 '96년도의 활동은 시작단계로서 시민참여제도화의 초 석을 마련하고 이제도의 실효가능성 모색과 실현모델개발에 주력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97년 도의 본격적인 참여를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할수 있다.

녹색위는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펼치는 환경행정에서 서울시와의 민간파트너로서 환경정책수립 과 집행과정에 제도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환경단체, 대학과 연구기관, 특수활동단체(산악회 스 크바다이버, 무선통신회, 낚사회등)들과 자치구의 시민등이 참여하는 환경오염시민감시망을 운영 하여 지역내 환경오염행위의 자율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뿐만아니라 서울시 환경정책에 대한 시 민홍보와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환경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 는데 노력한다. 동시에 서울시가 시민참여로 만들어 '97년 6월에 유엔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서울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인 「서울의제 21」 작성을 시민실천지표개발을 비롯해 완성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녹색위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

민선자치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하는 참신한 시정 3개년계획의 청사진에 기대를 가지고 의욕적 으로 출범한 녹색위의 진로가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이 지난 5개월간의 경험이다. 언론에서는 「활 동중단」 심지어 어떤 환경관련 주간신문에서는 「말뿐인 시민참여, 관변단체 전락우려」 또는 「녹색위의 진로 불투명」 등의 혹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불협화음이 불거져 나온 일차적인 원인은 지방자치 1년 평가에서 지적되고 있는 지방자 치단체들이 아직 중앙 또는 광역정부로부터 자치체의 기본조건인 자율권을 얻어내지 못한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구조정과 인사문제 및 재정집행상의 자율권을 이양받지 못한 자치제가 시정예의 시민참여라는 새로운 정책집행을 위한 여건마련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안타까운 것은 행정요원들의 행정우위의 고정관념과 기존행정 틀에서의 보신주의 적인 자세가 민선자치단체장의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의지를 담아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녹색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탄력성있는 운영의 묘와 결단성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녹색위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들은 대부분이 민주주의식이 강한 자주적이며 자율적이며 자발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시민참여의 실효성제고에 필수적인 이들의 창의성과 열의를 유도해 내는 것이 실효를 가름한다. 그것을 위해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양식이 ① 일시적인 참여가 아닌 상시적 참여 ② 강제(수동)적인 참여가 아닌 자율(능동)적인 참여 ③ 형식 또는 요식이 아닌 실질적 참여 ④ 행정대상으로서가 아닌 행정주체로서의 참여(동반자적 참여) ⑤ 기존 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창의성발휘가 가능한 참여 ⑥ 불신이 아닌 상호신뢰하는 관계의 참여 ⑦ 상호간의 역할의 존중과 보완적인 참여 ⑧ 공동목표달성을 위한 협동관계의 참여가 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민선지방자치=시민자치제하에서의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환경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은 처음 시도되는 새로운 행정구도이다. 지금까지의 관주도의 밑거름이었던 행정관행이 체질화되어 있는 행정요원에게 있어서나 행정에 관한한 관망자의 위치에 머물며 정부가 해주기만을 기대하는 시민에게 있어서나 정부방침에 따른 활동에 무비판적이었거나 자칫 시정예의 제도적인 시민참여를 백안시 할 수도 있는 시민단체에 있어서 익숙치 않은 일이다. 그만큼 시정예의 제도적 시민참여의 올바른 인식의 정립은 쉽지 않다. 반면 새로운 시도이기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여 기대를 가지게 한다. 이 말은 이들 모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뜻밖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민선지방자치에 있어서 이루어 내야만 하는 책무이므로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서도 안되는 과제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녹색위에 대한 기대

녹색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녹색위의 환경행정에의 참여가 앞으로 범시민운동으로 발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참여의 기회는 관념적인 서울시민이 아닌 골목골목마다에서 만나는 모든 남녀노소에게 주어져야 하고 녹색위의 활동단위는 자치구, 동, 통, 반단위의 현장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내용은 생활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운동으로 누구 나가 참여할수 있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민선지방자치시대를 열면서 민선시장의 시정방향제시에서 가장 잘 한일이 바로 서울시정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문호개방과 실질적인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시민 개개인의 참여 없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행정을 위해 각계 각층을 막나 하고 있는 녹색위의 설치 및 운영은 서울시의 환경행정을 밝게 전망하게 하여 주고 있다. 녹색위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발휘가능한 「환경자치」의 틀이 제대로 마련될 때 서울시의 환경행정에 큰 전환을 갖어 오며 지속가능한 서울 건설에 기여할것 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서울시의 환경행정의 핵심과제인 시민참여성과의 성취여부는 전국의 자치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주시한다.

방영숙: 강계장님 FAX 779-6094

“서울시의 환경행정 시민과 함께 한다”

박영숙(한국 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녹색 서울 시민위원회 위원장)

‘95년 7월에 출범한 민선시장시대의 개막과 함께 서울시가 인간적인 가치가 중심이 되는 시행정을 표방하고 향후 3년간의 환경행정을 시민과 함께 펴가겠다고 한 선언은 서울시민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지금까지의 관료위주의 행정과 은폐하기에 급급한 환경행정에 찌들려 있던 서울시민들은 이제야 민주시민으로서 그리고 환경의 파수꾼으로서의 두 날개를 얻은 듯 기대에 부풀게 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의 시민대표를 비롯 각계대표 100명으로 구성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바로 서울시민이 서울시의 환경행정에 참여하게 하는 교량과 장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정책분과위원회, 실천분과위원회, 그리고 환경오염 감시분과위원회를 두고 환경정책의 심의조정 및 대안제시,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실천운동과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각종오염의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위원회의 활동이 범시민운동으로 활성화 될때 서울시의 환경행정력은 강화되고 서울의 환경은 쾌적하게 될 수 있다.

3개분과위원회의 ‘96년도 사업과 예산안이 시장의 인준을 거치는 대로 모든 활동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공모에 의한 참여로 실시한다. 선발된 단체는 서울시민과 더불어 해당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가 시행정을 시민과 함께 한다” 이것은 새로운 시도이며 신명나는 일이다. 새로운 일은 새로운 제도에서 가능하며 신명나는 일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시민자치시대에 뒤쳐져 있는 우리 행정의 제도와 관례는 신명이 넘쳐 가벼워진 시민의 발목을 잡고 있어 시민의 열의를 잠재울까 염려된다. 매사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 우리 앞에 새로운 패러다임 실현의 기회가 자리하고 있다. 서울시와 시민이 머뭇거리지 않을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환경리사상
'99 여름기초

녹색서울 시민위원회 활동 평가와 과제

‘환경자치’의 한 상징으로서 큰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지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서울의제 21’을 선포함으로써 또다시 주목을 받은 녹색위. 그간의 발자취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박영숙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1. 21세기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시정 참여

지난 4월 6일로부터 1천 일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21세기는 경제의 세기였던 20세기와는 달리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는 환경의 세기이다. 그리고 21세기는 국가 주권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시되며 국제기구, 경제기구, 민간단체 등 사회조직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추세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구조인 지속가능한 순환사회 건설은 분권화가 제대로 이루어진 지방자치제(=시민자치제)에서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995년에 실시된 6·27 지자체 선거 이후 출범한 민선자치시대의 개막은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한 일이다.

우리는 현재 백척간두에 선 경제, 정치, 사회, 환경문제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의 위기상황 극복은 물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 문제를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경제계에만 내맡길 수는 없는 처지에 있다고들 흔히 말한다. 오늘날처럼 건전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필요성이 높은 때는 일찍이 없었다. 21세기 삶의 질 향상을 이룩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

시민의

천 일의

1세기는

와는 달

대한 요구

이다. 그

인이 약화

적합이 중

기구, 민간

행력이 강

것으로 에

수 있는

순환사회

로 이루어

자치제)에

이 높다. 그

5년에 실시

이후 출범

대막은 늦은

이다.

단두에 선 경

문제 등으로

고 있다.

은 물론 우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경

없는 처지

한다. 오늘날

회와 시민은

때는 일찍이

의 질 향상을

서 가장 중요

한 행위 주체이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의 유일한 대안이 바로 시민운동이라고 식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은 지역 주민이 지역 행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성취된다. 이전처럼 주민이 행정의 수혜자로, 통치 또는 관리 대상으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지방자치 개막과 더불어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행정(삶의 조건을 만드는 과정)을 지역 주민과 함께 수행해 나가겠다고 한 선언을 선언으로 그치게 해서도 안된다. 이 책임은 지역사회 구성원(주민, 기업, 행정) 모두에게 있다.

특히 지역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실천이 따라주어야 하는 환경행정에 있어서 주민 참여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환경행정의 효율성이란 정책 결정자의 선언이나 정부의 규제로만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21세기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유엔의 행동계획인 '의제 21'에서 지역 주민과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증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권역적으로 계획하고, 지역적으로 (선 자리에서) 행동하라 (Think Globally, Plan Regionally, Act Locally)'라는 지구환경보전의 표어는 바로 그런 점을 근

거로 만들어진 것이다.

2.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의 창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위)는 6·27 지방자치선거 이후 출범한 민선 서울시장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서울의 환경문제 개선과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행정을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구성한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1995년 11월 22일에 시장이 임명한 1백 명의 서울시 각계 대표(기업 및 시민 대표 25명, 시민·환경단체 25명, 언론계 14명, 학계 9명, 시의회 7명, 연구소 5명, 교육계 5명, 기술계 4명, 법조계 2명)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위가 자치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96년 2월 14일에 개최된 제1차 정기 회의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집행기구가 구성된 이후부터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활동의 가동은 199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시장 인준을 거친(운영조례 제5조) 5월 초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민의 행정 참여의 법적 근거는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제정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운영조례)'에 두고 있다.

녹색위가 서울시 산하에 있는 80여개의 민간기구로서의 자문위

참여민주주의 실현은 지역 주민이 지역 행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성취된다. 이전처럼 주민이 행정의 수혜자로, 통치 또는 관리 대상으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지방자치 개막과 더불어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행정을 지역 주민과 함께 수행해 나가겠다고 한 선언을 선언으로 그치게 해서도 안된다. 이 책임은 지역사회 구성원(주민, 기업, 행정) 모두에게 있다.



서울시의 어느 구청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순
환사회 건설은 지방자치, 시민자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3107-9697

위원회와 다른 점은 그 운영을 자치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위원회에는 자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독자적인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고(운영조례 제7조) 사무실을 서울시 환경관리실 내에 두고 (제7조 ④) 있다(전화 : 778-0311 전송 : 778-0312).

운영조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은 △주요 환경정책 심의 및 정책대안 건의 △환경교육 및 홍보, 환경보전 실천운

동 전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환경정책', '시민실천' 그리고 '환경오염 감시' 등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분과위의 활동은 시장이 부여하는 의제에 대해 심의하기도 하고(제16조 ①) 위원회 스스로가 환경행정과 관련한 대안 제시를 시장에게 할 수도 있다(제16

조
요
에
공
관
을
과
여
원
회
취
요
청
실
시
운
영
조
에
되
어
녹
대
한
고
사
역
할
지
향
하
환경
행
로
화
는
사
록
하

3. 그간

시민
이
민주
을
시민
은
민선
시민과
이었다.
제
민
원
것이
없

조 ②). 녹색위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21조).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22조). 녹색위가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운영조례 제23조 ①, ②항과 제24조에 의거해 시장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녹색위는 서울시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의 창구이다. 그리고 서울시정부와 시민간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녹색위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서울시의 환경행정이 범시민적 생활운동으로 확대되어 서울시의 환경문제는 서울 시민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3. 그간의 발자취와 당면 문제

시민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갈망하는 서울 시민들이 무엇보다도 반긴 것은 민선 서울시장의 시정을 서울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주권재민 원칙에서 보면 새삼스러울 것이 없으며 너무나 당연한 것이

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것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이제야 시민들이 행정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의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데 있다. 자기의 삶의 조건을 자기가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신명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넘어야 할 현실의 장벽이 높고 두껍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시정을 시민과 함께'라는 행정 구호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의욕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기회였던 지난 1년 여간 경험한 것은 엄청난 갈등이었다. 권위적이고 타성에 젖어 있는 관료조직 속에서 시민이 행정의 파트너로서 대등하고 협력적인 위상을 정립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현실의 일차적인 근본 원인은 지방자치제가 그에 걸맞은 제도와 환경의 마련 없이 출범했다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정부로서의 자치업무와 자치행정의 관권인 자율권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민선 자치단체장의 참신한 정책 집행과 잘못된 행정 관행의 개선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각급 자치단체에게는 지역 특성에 따른 정책이 필요로 하는 직제 개편권과 인사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내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시민의 행정

이러한 현실의 일차적인
근본원인은 지방자치제가
그에 걸맞은 제도와 환경의
마련 없이 출범했다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정부로서의
자치업무와 자치행정의
관권인 자율권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민선
자치단체장의 참신한 정책
집행과 잘못된 행정 관행의
개선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참여기구 설치 또는 민간단체를 잘 아는 전문인력 배치 등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독창적인 행정이 요구하는 조례 제정 등의 입법권과 재정 운영의 개선권도 없다.

이런 상태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행정 집행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

서울시청. 지방자치는 실시되었지만 자율권 부재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을 위한 창의적인 행정이 꽃피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으로 행정 집행의 주체인 공무원에게 달려 있다. 그런데 이들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의 감사 제도에 의해 업무 평가를 받아야 하는 피감사자로서 행정의 효율보다는 감사의 무사통과에 더 큰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이나 사정기관은 일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기보다 한 일에 대한 잘못을 문제삼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보신을 위한 복지부동의 행정 행태를 취할 수밖에 없고 이런 처지에서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행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 공무원 사회의 현실이다. 대과만 없으면 연공으로 승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과 재임을 위해서는 재심판을 거쳐야 하는 민선 자치단체장이고 보면, 행정 비전과 공무원의 정책 집행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오늘 서울 시장의 한 단면이다.

이런 현실에서 유권자인 지역주민을 위해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는 민선 자치단체장의 시정 운영이 여의치 않을 것은 물론 서울시의 경우 녹색위 운영이 순탄치 못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녹색위가 출범 초기부터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여 주력한 부분은 행정의 동자력자(카운터파트)로서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자

주권 확보였다. 서울시 각계각층의 시민의식이 투철한 개인 또는 자율적인 민간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녹색위 위원들로부터 행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 산하에 민간 참여의 통로라는 명목으로 설치돼 있는 자문위원회와 같은 유명무실한(『동아일보』 1997년 4월 18일자 3백50여개 자문위원회의 운영 실태 기사 참조)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자문위원회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미리 정해 놓은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의견 수렴이라는 요식 절차를 갖추어 주는 데 머물고 만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앙 및 지방정부간 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에게 실질적인 임무와 의견권을 부여하는 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현행 자문위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시 행정의 시민 참여는 새로운 시도로서 행정부에 있어서나 시민에게 있어서 생소한 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면에 올바른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경우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행정부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낼 수도 있으므로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는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4. 활동 성과

현재 가장 원초적인 문제(사무국 정상운영 등)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녹색위의 활동 성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녹색위가 지금까지 전개하고 있는 활동은 시작 단계의 것으로 시민의 환경행정 참여의 가능성 모색과 위상 정립, 참여모델 개발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본격적인 시민 참여를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년 여간의 활동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시민의 시정 참여라는 과제를 놓고 시민과 공무원 사이에 빚어진 갈등과 마찰 속에서 각자의 실체를 확인하고 잘못을 시정하며 오해를 풀어나가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솔직하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행정 우위의 권위주의적 의식과 시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으로 양측 사이에 가로놓인 높은 장벽이 무너지고 철통같은 밀폐 행정의 베일이 서서히 벗겨지면서 민주행정을 위한 토대의 밑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이다.

녹색위의 활동 전개는 서울시 환경행정을 범시민운동으로 이끌

시 행정의 시민 참여는 새로운 시도로서 행정부에 있어서나 시민에게 있어서 생소한 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면에 올바른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경우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행정부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낼 수도 있으므로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는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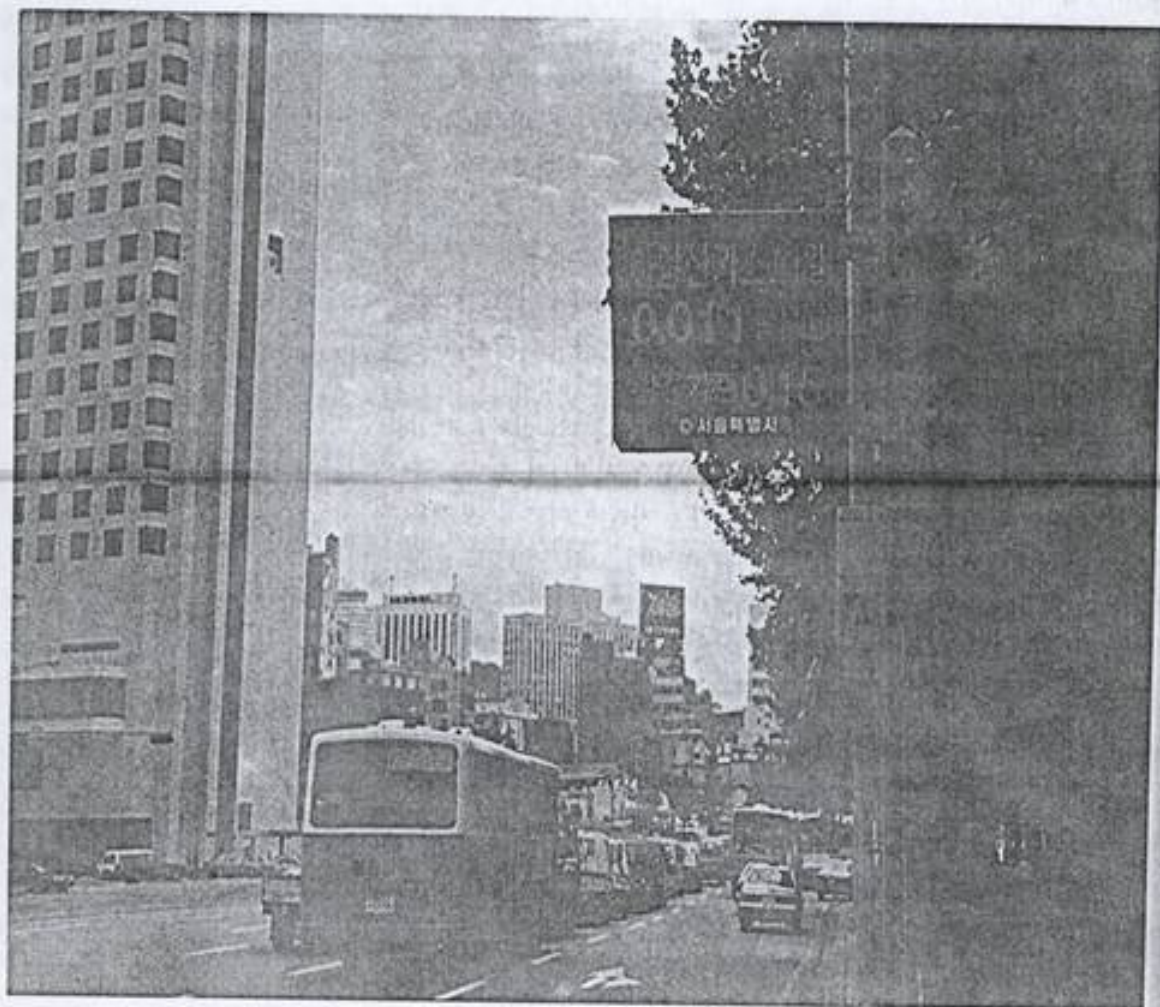


기 위해 녹색위의 모든 사업에 시민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응모하게 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사업을 선정·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업 공모는 녹색위의 3개 분과위원회가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책정한 지정 사업과, 서울시 환경행정과 관련한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다양하고 참신한 발상으로 이루어진

일반 사업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다. 선정된 사업은 서울시 환경행정을 보다 내실있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6년도에는 2억5천4백여만원의 예산으로 21개 단체들이 18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1997년도에는 5억8천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39개 단체의 40개 사업이 심사 결과 책정되어 현재 선정된 단체들이 11월 말까지 사업

덕수궁 옆에 설치된 대기오염 전광판. 녹색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서울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사업
응을
과제
업
큰
과는
회에
제발
으로
연계
있다
회 주
유도
녹
하여
원회
개하고

실시하
서울시
에 하는
한다.
백여만
이 18
며 1997
해당하
40개 사
현재 선
지 사업

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의 예를 들
어 보면 1996년의 경우 △조사·
연구사업으로서 서울 시민의 환
경의식 및 실천 연계의식 조사,
환경행정 시민 참여 방안 연구,
환경분쟁 사례 및 갈등 해소 방안
연구, 동 단위 시민 참여 조직 건
설 방안 연구 등 △실천운동으로
서 셋강 살리기, 녹색소비를 위한
캠페인, '맑고 푸른 서울 만들기'
시민 한마당, 녹색 예술문화 공연,
자동차 폐기물 무단방류 방지 캠페인, 환경오염 감시활동 전개 등
△지도력 양성으로서 환경 활동
가 훈련 세미나, 환경 감시원 교
육자료 제작 등을 꼽을 수 있다.

1997년도의 사업은 1996년도
사업전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내
용을 보다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과제들을 선정했는데, 전년도 사
업 추진이 소수의 전국 조직체인
큰 단체들에게 주로 위탁했던 것
과는 달리 보다 많은 수의 지역사
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작은 과
제별 조직체들의 참여를 권장함
으로써 기초지자체들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환경은 지역사
회 주민들이 스스로 지켜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녹색위는 시민단체들에게 공모
하여 실시하는 활동 이외에도 위
원회 자체가 운영하는 사업도 전
개하고 있다. 1996년도에는 '서울

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서울특별
시 환경선언', '녹색서울시민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
른 과제 수행을 비롯해, 1996년 6
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있었던
1천5백 명의 환경오염 감시단 발
족, 생태계 보전 시민 캠페인 전
개, 1996년 지구의 날 자전거 대
행진, 기초자치구의 녹색구민위원
회 위원들의 워크샵과 자치구 환
경정책을 위한 시민 토론회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금년도 상반기 중 녹색위가 주
력한 것은 지난 6월 5일 '97 세계
환경의 날 서울 국제행사를 기해
선포한 '서울의제 21' 수립을 위
해 2백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의
제 포럼'의 운영이었다. 이 포럼은
그동안 8개 분과로 나뉘어 '서울
의제 21' 작업을 수행한 결과, 현
재 여기에는 30개의 개선 목표에
따른 3백65개의 행동계획이 담기
게 되었는데, 이것은 광범한 시민
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작성된 것들
이다. '21세기 녹색서울 만들기'로
이름지워진 '서울의제 21'의 영역
관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에 제출되는 한편, 금번 유엔환경
특별총회에 배포되어 좋은 반응
을 얻은 바 있다.

녹색위가 오늘의 녹색위로 유
지될 수 있었던 것은 녹색위의 1
백인 위원과 '서울의제 포럼'에
가담한 1백여 명의 전문가들의 헌
신적인 노력과 공모사업에 참여

녹색위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첫째

시민(행정시민, 기업시민,

지역시민)의 참여와 연대로

시민자치시대,

환경자치시대를

만들어가는 일,

둘째, 지구환경문제 해결의

열쇠인 시민 개개인의

환경친화적인

생활(행동)양식을

정착시키는 일,

셋째, 지속가능한 지구와

서울을 만들기 위한 21세기

행동계획인 '서울의제

21'을 실천·추진하는

일이다.



한 지역사회 민간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담당 공무원들의 지원 그리고 사무국의 희생적인 봉사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5. 향후 과제

녹색위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시민(행정시민, 기업시민, 지역시민)의 참여와 연대로 시민자치시대, 환경자치시대를 만들어가는 일 △지구환경문제 해결의 열쇠인 시민 개개인의 환경친화적인 생활(행동)양식을 정착시키는 일 △지속가능한 지구와 서울을 만들기 위한 21세기 행동계획인 '서울의제 21'을 실천·추진하는 일이다.

녹색위의 과제는 21세기의 서울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 문제를 서울 시민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서울시 환경행정에 참여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녹색위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과제 달성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이며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녹색위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본 과제를 몇 가지만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과제들은 현재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들의 '지방의제 21' 실천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간의 협력관계 및 네트워크 구축 : 서울을 환경공동체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별로 균형있는 참여와 대등 협력적인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녹색위가 '서울의제 21' 작업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민간단체나 학계 전문가들의 일성적인 참여에 비해 행정부의 범부서적인 참여와 기업 부문의 참여가 부진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정부와 기업의 환경의식이 시민사회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정부가 시민을 행정의 대상으로, 기업이 시민을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권력 우위 및 자본 우위의 풍조에 사로잡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녹색위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시민의 권리의식을 일깨우는 한편 올바른 협력관계와 연대관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위한 제도 보완 : 시민의 시정 참여를 보장해 주는 올바른 제도의 마련 없이 사안에 따른 민선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의지와 관행에만 의존한다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현행 녹색위의 법적 근거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불완전하다는 데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녹색위의 현실적 운영과 운영조례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 요인이다. 그 근원은 조례 제정이 상위법의 제약을 받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녹색위의 자치적 운영을 위한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서, 이는 현실과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체의 자치권 확보 : 우리는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지난 시점에 서 있다. 지난 2주년을 평가하자면 일부 우려와는 달리 지방자치체가 비교적 잘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중앙집권적 행정의 틀과 관행을 변화없이 유지하고 있는 오늘의 지방자치체가 명실상부한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에 필요한 자치입법권을 비롯해 조직권, 인사권, 재정여건 개선권 그리고 자치사무 확대권 등에 대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오랜 세월 다져진 고질 현상들에 대한 개혁이 단시일 내에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세월에만 내맡기거나 자치단체들의 노력에만 의존해서 될 일도 아니다. 또한 자치단체장들의 자치권 확보의 주장은 자칫 이기적인

주장으로 일축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요인으로 미루어 지방자치제=시민자치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선행 과제인 관련제도의 제·개정을 위해 이제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시민의 환경행정 참여 모델 개발 : 녹색위가 목표하고 있는 서울시 환경행정을 범시민 생활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실용성있는 활동의 틀을 필요로 한다. 막연히 시민의 참여라기보다는 구민의, 동민의, 통·반 단위의 주민들이 어떻게 얼마나 참여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 과제의 성패를 가름한다.

지역사회 구성원 또는 집단 모두는 환경과괴에 대한 이해자이고 피해자인 동시에 감시자이다. 따라서 먼저 이해자로서는 환경친화적인 행동(생활)양식(에너지와 물과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자원 재활용,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을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로서는 쾌적한 지역 만들기(동네 미화와 녹화, 하천 살리기, 공원·문화재 등의 실명제 관리 등)에 앞장서게 해야 한다. 다음 감시자로서는 지역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주민, 기업, 정부 상호간의 감시활동을 전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1인3역의 행동 지침은 서울시 환경행정과 '서울의

제 21'의 실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고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6. 맺음말

세계는 지금 삶의 질 향상 추구하고 공동체 사회 회복 그리고 작은 정부 만들기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정부를 갖춘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부기구에 민간참여기구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그 활성화를 위해 행정 요원을 민간단체 지도자들로 대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서울시가 환경행정을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구성한 녹색위의 운영을 민주 원칙에 의해 정상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협력관계가 형평성있게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바로 서울 시민이 바라고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을 새로운 공동체 사회로 재편하며 행정력 보완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박영숙 : 1932년생.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지리학과 지구환경학 수업. 전 한국 YWCA연합회 총무, 제13대 국회의원·보사위원회 위원,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현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서울시가 환경행정을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구성한 녹색위의 운영을

민주 원칙에 의해

정상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협력관계가

형평성있게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바로 서울 시민이

바라고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을 새로운

공동체 사회로 재편하며

행정력 보완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